

제4차 릴레이 정책토론회

“경제재도약 **중견기업**에서 찾다”



백년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향

- 가업승계와 일감몰아주기를 중심으로 -

(발표자 : 조병선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 · 주정일 삼일회계법인 전무)

2013년 8월 6일 (화) 10:00 ▶ 12:00

국회 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

공동주최 | 국회의원 강길부, 강창일, 김한표, 설훈, 이만우, 이원욱

공동주관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학회



백년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향 -가업승계와 일감몰아주기를 중심으로-

목적

가업상속공제와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백년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과제를 논의

행사개요

- 일 시: 2013년 8월 6일(화) 오전 10:00~12:00
- 장 소: 국회 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
- 주 최: 국회의원 강길부, 강창일, 김한표, 설훈, 이만우, 이원욱
- 주 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학회
- 참 석 자: 30명 내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정부 및 기관)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동반성장위원회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CEO 8명 내외
(학계) 대학교수 3명 내외



세부일정

구분	내용
10:00~10:10	인사말씀 및 소개 (국민의례)
10:10~10:30	주제발표 1.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과 중견기업 가업승계 발표자: 조병선 교수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10:30~10:50	주제발표 2. 중견.중소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중여세 부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발표자: 주정일 전무 (삼일회계법인)
10:50~11:50	자유토론
11:50~12:00	마무리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과 중견기업 가업승계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

조 병 선 교수

• 목차

- 글로벌 히든챔피언과 장수기업
- 우리나라 가업승계 지원제도
- 중견기업 가업승계 현황 및 문제점
- 외국의 가업승계 지원제도
- 독일식 가업승계제도 도입방안
- 기대효과



■ 들어가며 (A 기업 사례)

세계시장 점유율 1위, 글로벌 중견기업

설립	1980년대 중반
업종	산업용 기계류 부품 제조
매출액	6,000억원 (국내 50%, 해외 50%, 수출 비중 50%) 세계시장 점유율 1위(30%)의 글로벌 전문기업
종업원 수	전체 2,530명 (국내 930명, 해외 1,600명) 국내에서만 최근 3년간 300명 이상 신규고용 창출
자본금	배당을 자제하고 내부유보 치중 + 자산재평가 등으로 크게 증가
대표자(창업자)	60대 중반
최근 4년간 납부세액	900억 (부가가치세 + 법인세 + 종합소득세)

가업승계를 원활히하여 사업을 지속할 경우

■ 매년 120명의
양질의 신규일자리 창출

■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성장

■ 가업승계 후 3~4년 안에
상속세에 해당하는 세금납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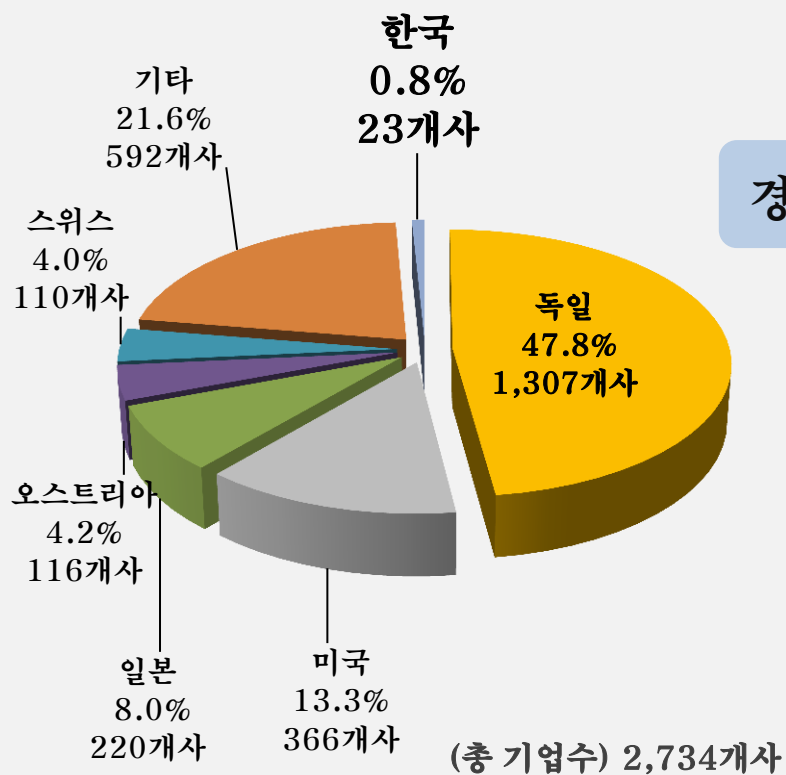


글로벌 히든챔피언과 장수기업



[1] 글로벌 히든챔피언

글로벌 히든챔피언의 절반은 독일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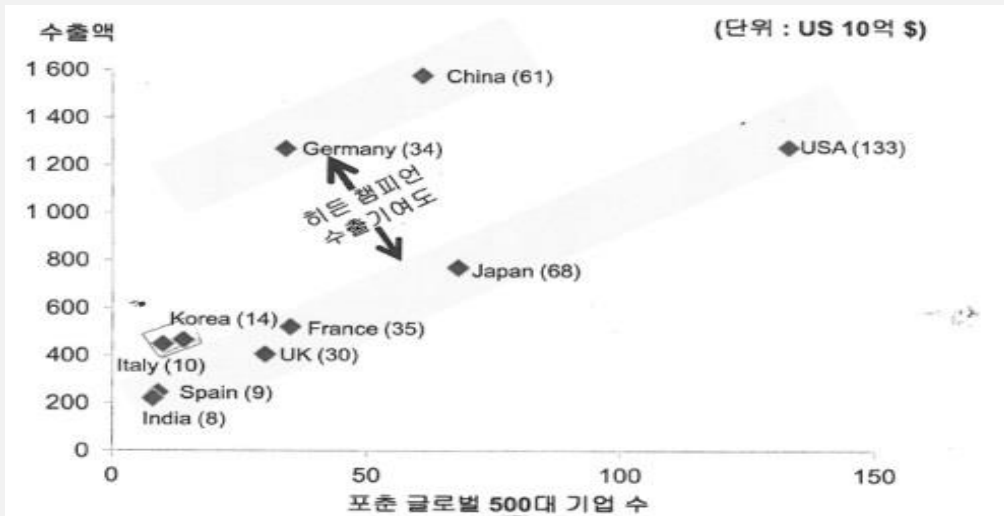


경제 · 사회적 기능 및 역할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 변화 리드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간 균형발전 촉진
수출강국 전인

독일 히든챔피언의 주요 성과

- 지난 10년간 100만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연평균 10%씩 성장 → 95년 대비 매출액 4배 상승
- 신흥억만장자 200명 이상 배출
- 독일 전체 수출의 40% 차지 (전체수출의 70% 미텔슈탄트)
- 세계시장 점유율 가파른 상승
- 수많은 혁신을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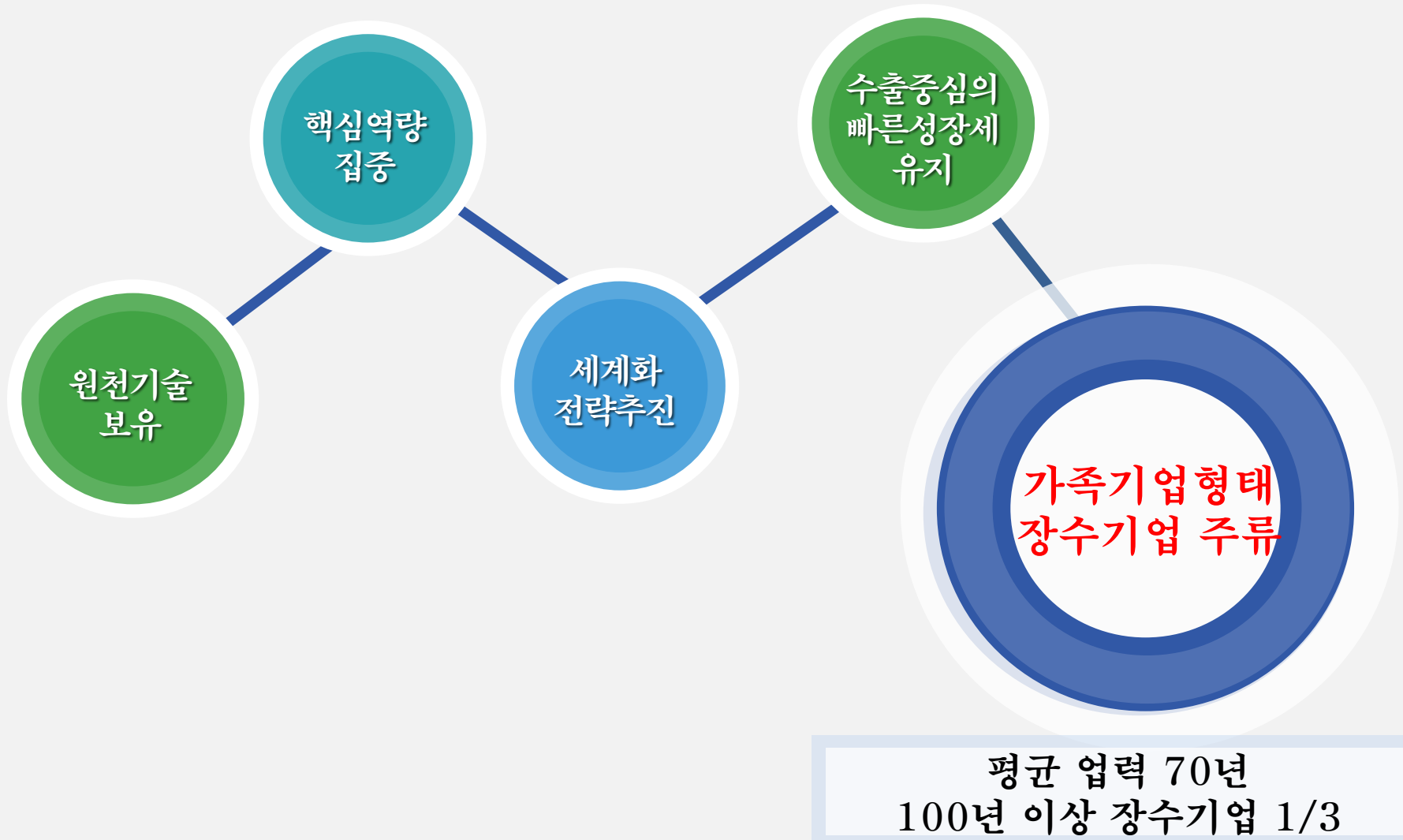
헤르만 지몬(Hermann Simon)

“독일의 수출성과는 대기업이 아니라 중견기업, 특히 히든챔피언 덕분이다. 한 국가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출 대기업 뿐만 아니라 강한 수출기업을 광범위하게 육성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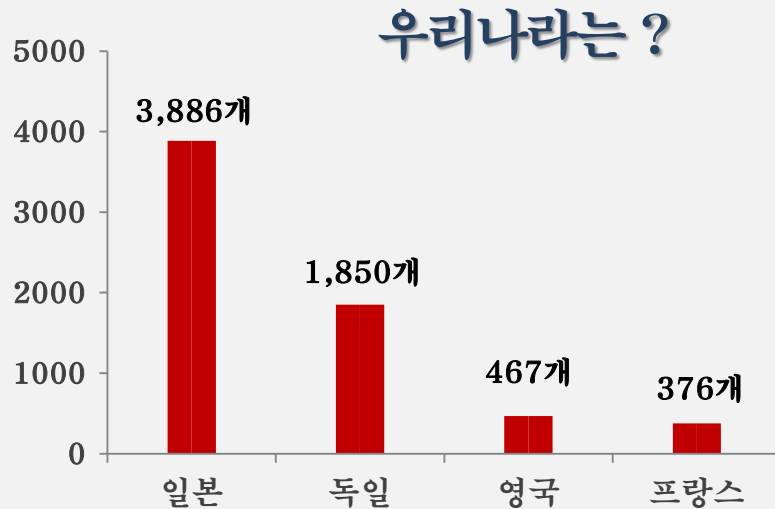
한국은 수출대기업은 많지만 중견 수출기업 비중은 아직은 미약한 편이다”

<히든챔피언의 수출기업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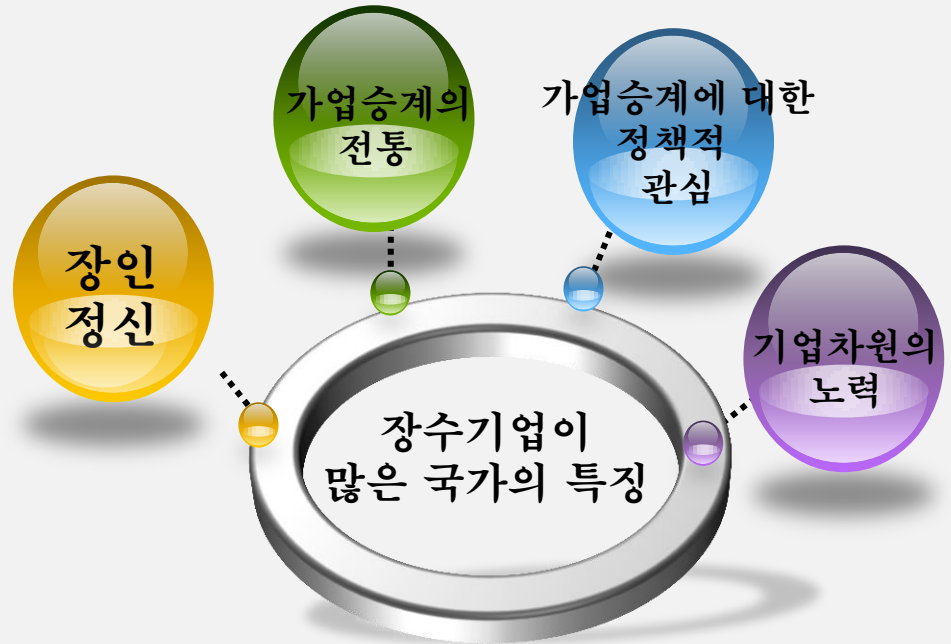
히든챔피언의 경영특성



[2] 나라별 장수기업 현황



<200년 이상 장수기업 수>



피터 드러커

“**가업승계**란 가족기업이 대를 이어 생존할 수 있도록 사업을 다음세대에 물려주는 것이다. 성공한 가족기업 리더라면 누구나 치루어야 할 마지막 시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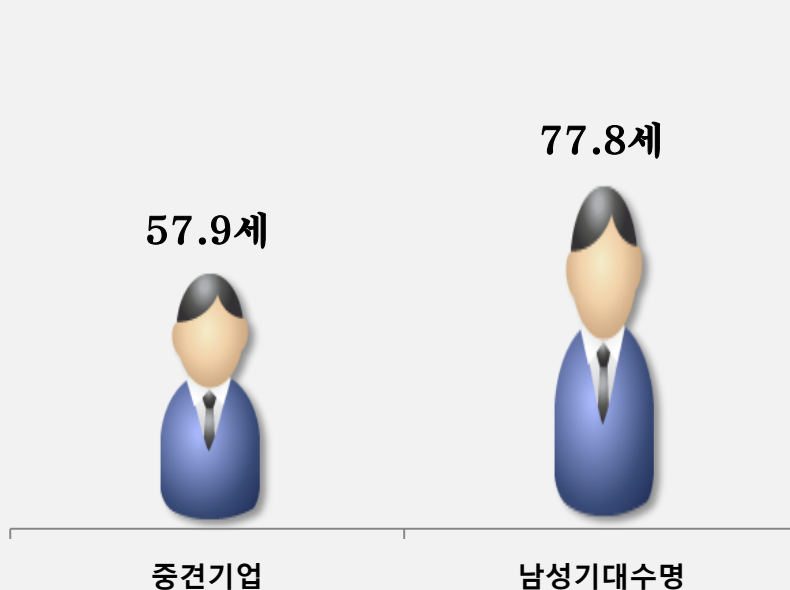


우리나라 가업승계 지원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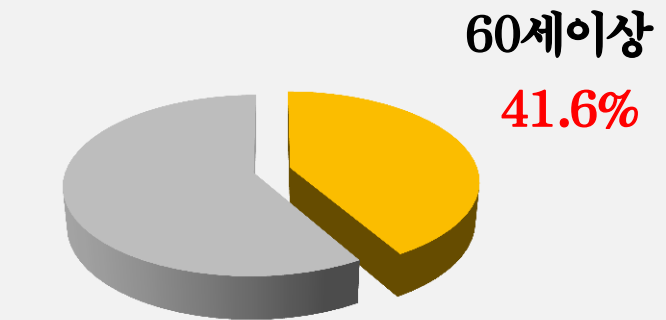
[1] 기업승계지원 추진배경

창업세대 CEO의 고령화 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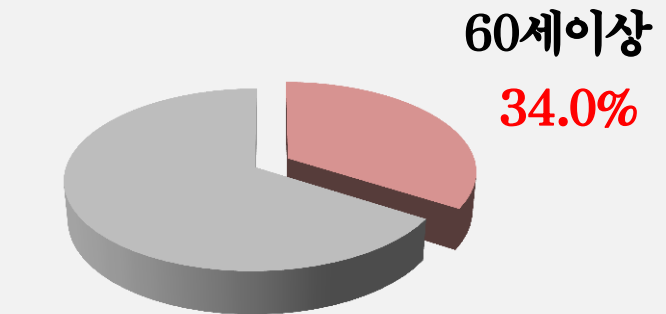


〈중견기업 CEO 평균연령〉

(자료) 2011 중견기업 통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주1) 분석 중견기업수: 1,403개사
분석 중소기업수: 24,083개사



〈중견기업 60세 이상 CEO 비중〉



〈중소기업 60세 이상 CEO 비중〉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국가경제에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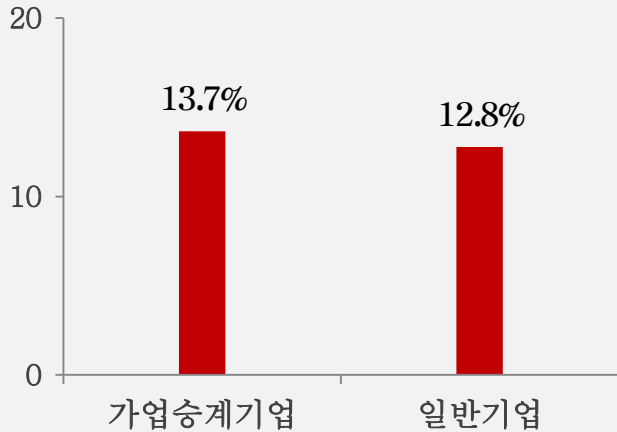
- ① 원활한 가업승계는 명품 장수기업 탄생의 초석
 - 양질의 일자리 확대, 산업의 경쟁력 제고
- ② 가업승계가 적기에 이루어 지지 않을 때 부작용
 -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른 보수 안정경영 선호로 투자위축, 성장 및 고용 정체
- ③ 승계과정에서 잘못되면 폐업 또는 매각
 - 일자리, 생산설비, 고유기술 등 소멸

〈CEO 고령화에 따른 경영성과(2003~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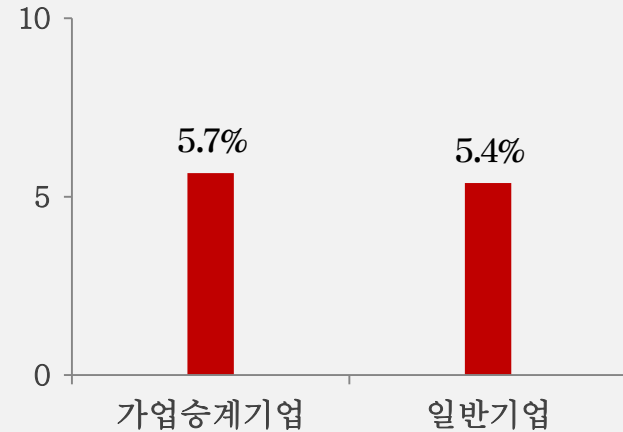
구분	CEO고령화기업	일반기업
고용증가율	-0.03%	2.47%
총자산증가율	9.98%	13.43%
총매출증가율	8.30%	11.86%
고정자산증가율	14.38%	18.10%
연구개발비 (매출액대비)	0.80%	1.36%
총자산대비 순이익	4.50%	2.76%
1인당 노동생산성	2.56억원	2.89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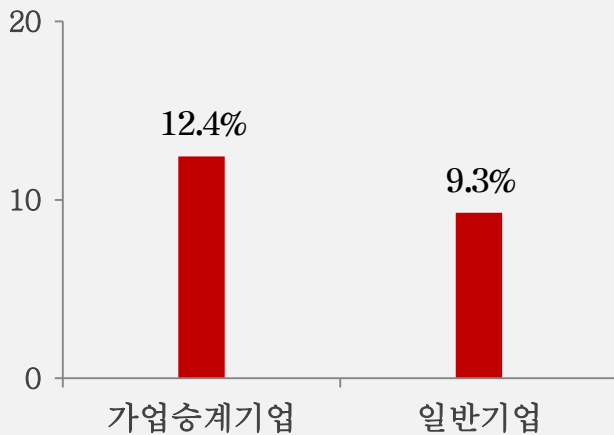
가업승계 완료기업의 경영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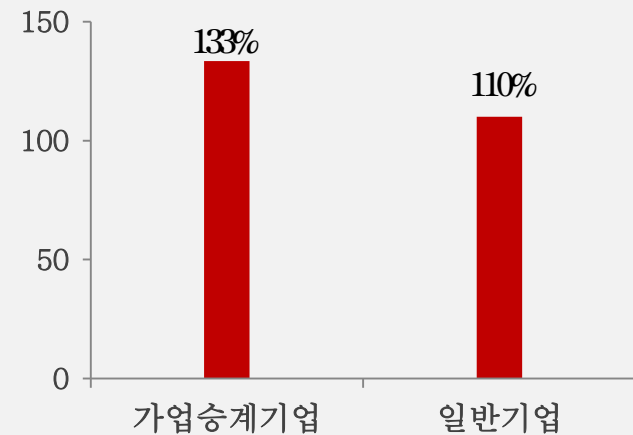
〈자산성장률〉



〈매출액 순이익률〉



〈매출액성장률〉



〈부채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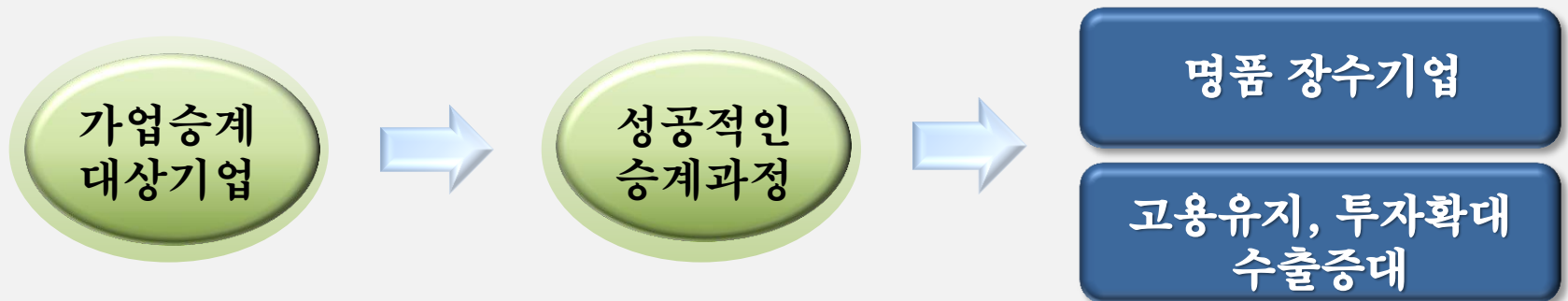
[2] 기업승계 정책 목표 및 방향

기업승계에 대한 인식

부의 대물림이 아닌 **책임과 기업가정신의 대물림**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성장, 고용안정, 생산설비와
경영노하우의 효율적 활용 및 전수 관점에서 접근

지원정책의 목적

가족기업의 안정성 및 지속성 확보 + 국민경제성장 및 경쟁력 제고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부문별 역할

승계계획 수립 및 관리
유능한 후계자 육성
사회적 책임 감당

기업

원활한
가업승계

가업승계를 창업과 같은
차원에서 지원

정책당국

적절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속적인 관심

유관기관

[3] 가업승계 관련 세제

지원대상 기업규모

- ▶ 중소기업
- ▶ 중견기업 (매출 2,000억 이하)

세법상 가업요건

피상속인 요건

- ▶ 최대주주
- ▶ 10년 이상 계속 경영
- ▶ 발행주식총수 50% 이상
(상장법인 30% 이상)

(3) 기업승계 관련 세제

	적용대상	지원내용
기업상속공제	중소기업 (중견기업: 매출 2,000억 이하)	70%공제 (최대 300억 한도)
증여세 과세특례	중소기업 (중견기업: 매출 2,000억 이하)	5억 공제 (30억 한도) 10% 특례세율
비상장주식 평가	중소기업 범위 초과 중견기업	지분율 50%초과: 30% 할증 지분율 50%미만: 20% 할증
연부연납	중소기업 (중견기업: 매출 2,000억 이하)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시) 상속재산 중 기업재산 비율 50%이상: 3년거치 12년간 분할 50%미만: 2년거치 5년간 분할

주) '창업자금의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는 제외

(3) 기업승계 관련 세제

① 기업상속공제 제도 (상증법 제18조2항)

➡ 상속세 경감으로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

- 적용대상: **10년이상** 피상속인이 경영한 중소기업(조특법상), 매출액 2,000억원 이하 중견기업을 18세 이상 **상속인 1명**이 전부 적법하게 상속
 - 지원내용: 기업상속재산가액의 **70%를 과세가액에서 공제**
- * 기업영위기간 10년 이상: 100억, 15년 이상: 150억, 20년 이상: 300억 한도

1. 피상속인 요건



- ① **가업영위기간의 60%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 ② 10년 중 8년 이상 재직 (상속개시일부터 소급)

2. 상속인 요건



- ①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
(천재지변, 화재 등 인재로 인한 피상속인 사망 등인 경우 2년이 안되어도 가능)
- ② 상속인 1명이 가업 전부를 상속받은 후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대표자) 취임**

3. 10년간 사후관리

① **가업용 자산 20% 이상 처분한 경우** (상속후 5년 이내는 10%)

②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이 아닌 경우
가업의 주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③ **상속인 지분이 감소한 경우**

- ➡ 상속인이 상속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유상증자 시 상속인이 실권하여 지분율이 감소되는 경우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특수관계자가 주식처분 등)

④ **정규직 근로자 1.2배 유지**를 못한 경우

- ➡ 중견기업은 상속 후 10년간 고용평균 1.2배 유지(중소기업은 1.0배)

“위반시 이미 공제받은 **가업상속공제액은 부인하고 상속세를 부과**”

(3) 가업승계 관련 세제

②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조특법 제30의6)

➡ 증여세 경감으로 생전에 계획적인 가업승계 지원

- 적용대상: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 1명이 60세 이상 부모가 운영하는 10년 이상된 중소기업(조특법상), 매출액 2,000억원 이하 중견기업 주식을 '13.12.31.까지 증여 받아 적법하게 승계한 경우
- 특례내용: 증여재산가액(30억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해 증여세 과세후 부모 사망시 상속재산으로 재정산

(3) 가업승계 관련 세제

③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제도 (상증법 제71조)

➡ 가업상속분 상속세 납부 편의 제공

- 적용대상: 상속세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시
- 지원내용: **가업상속재산 해당 상속세액**은 장기 분할납부를 허용하여 일시 납부에 따른 자금압박 해소

총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 점유비율이

- 50%이상: 3년 거치후 **12년간 분할납부** (최장 15년)
- 50%미만: 2년 거치후 **5년간 분할납부** (최장 7년)

[3] 기업승계 관련 세제

④ 중견기업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조특법 제101조)

- 적용내용: **중견기업의 주식(비상장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 평가**
 - * 중소기업은 할증평가 배제
- 중견기업은 20% (**지분율 50% 초과시 30%**) 할증평가



중견기업 가업승계 현황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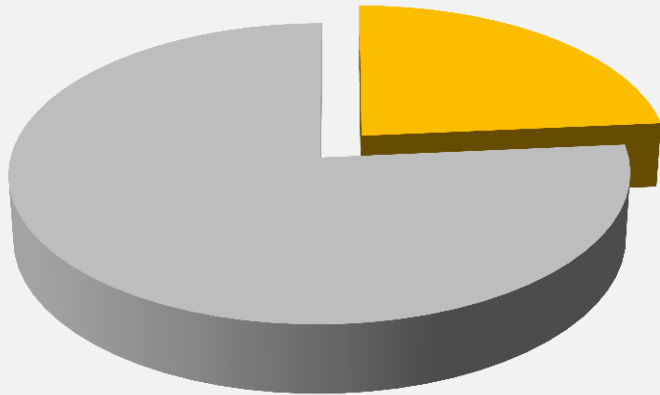


[1] 가업승계 추진현황

승계를 계획중인 중견기업: **23.6%**

(중견기업 실태조사,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012)

가업승계
계획
23.6%



가업승계 계획기업 특징



평균
업력
34.3년



경영자
평균나이
59.4세



평균
상시근로자수
490명

[2] 기업승계과정에서의 공통 애로

승계비용

상속세 최고세율 50%
(실효세율 65%, 세계최고)
할증평가 30%
엄격한 기업상속요건 등



후계자 육성

가업을 이어갈
후계자를 선정 및 교육



“승계 이후 기업체력 저하”

이해관계자 관리

가족, 임직원, 거래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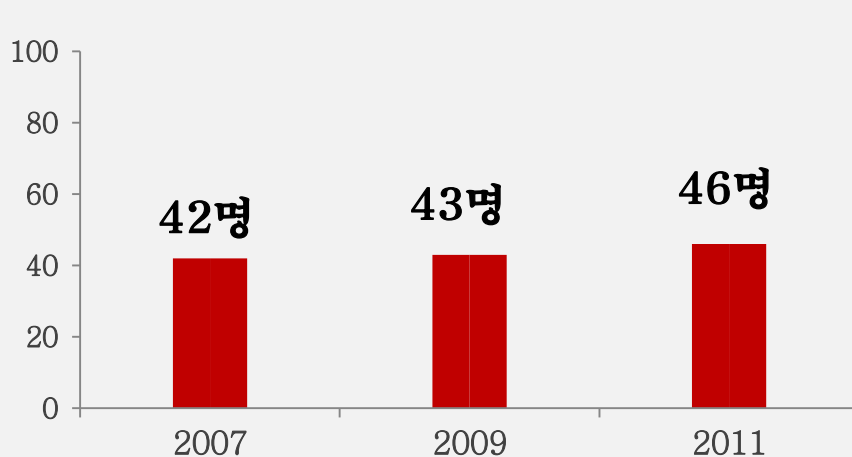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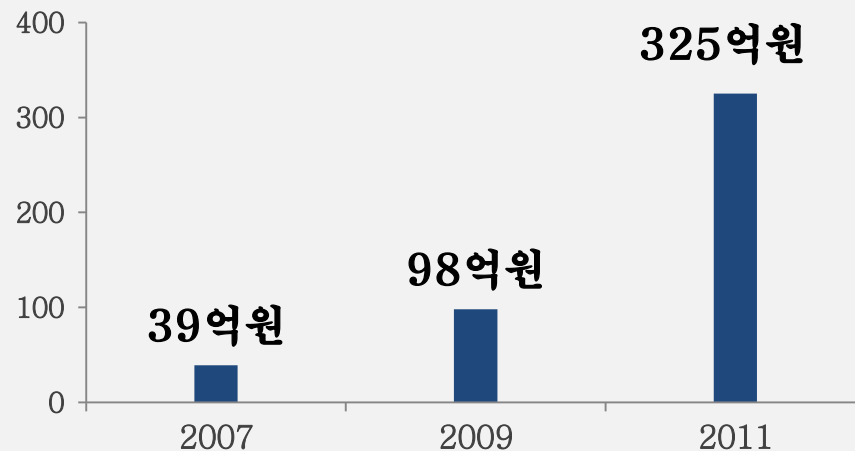


[3] 기업승계 지원세제 활용

활용도 부진



〈기업상속공제 수혜자수/중소+중견〉



〈기업상속공제 금액〉

[4] 다수 중견기업이 지원대상 제외

지원대상(매출액 2,000억)을 초과한
중견기업이 다수 (497개, 중견기업의 35%)

(단위) 개사

매출액	2천억원 이하	2~5천억원	5천억~1조원	1조원 이상	합계
기업수	925	294	127	76	1,422

(자료) 2011 중견기업 통계

(5) 중견기업 가업승계 관련 사례

■ 과다한 조세부담 + 엄격한 사후관리 요건 → **현행 세제로는 원활한 사업승계 곤란**

* 상속세액의 70%이상 자체조달 가능 기업: **4.7%** (기업은행)

사례 1 : A기업 (할증평가에 따른 부담가중)

- World class 300기업
- 예상되는 상속세액은 약 400억원, 세액에 해당하는 만큼 주식을 매각한다면 최대주주 지분을 이 절반이상으로 급감, 경영권 위협에 노출될 우려
- 가업승계 과정에서 상속세 및 할증평가로 인해 경영권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됨.
- 업종특성상 전문화가 중요하므로 중견기업에게도 가업승계를 지원하면 대대로 가업을 승계하여 지속가능한 경영체제 마련 가능
- 지속적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중견기업의 경우 가업승계 지원대상에 포함했으면 함.

사례 2 : B기업 (경영권 위협)

- 2007년 중견기업으로 성장
- 3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음.
- 가업상속 당시 뿐만 아니라 승계 이후에도 적대적 M&A압력을 받아 경영권의 위협을 받음.
- 승계자가 지분을 확보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급여 및 배당을 올려 확보하는 것은 대안이 아님.
- 상법상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frac{1}{4}$ 를 초과할 수 없는데 이는 경영권을 방어하기에 매우 부족한 실정

사례 3 : C기업 (고용유지 120% 애로)

- 해당산업에서 국내 1위, 세계 2위인 기업으로 2013년 중견기업으로 성장
- 동종업계 매출액 1위를 차지하면서 업종전문화를 위해 가업승계를 고려하고 있음.
- 업종특성상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시장상황에 따라 10년간 120%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움.
-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인 고용유지 조건보다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동적인 의무조건 부과가 필요



외국의 가업승계 지원제도



[1] 주요국의 승계 관련 세제

	한국 	독일 	미국 	영국 	일본 
기업규모	중소기업 중견기업 (매출액 2천억원 이하)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비상장 중소기업
피상속인요건	사업영위기간 지분을 대표이사 재직요건	없음	소유기간 지분을 사업참여여부 거주지요건	소유기간	지분을 사업참여여부
상속인요건	가업종사 임원취임 연령요건	사업계속성 급여총액유지	사후관리서명요건	없음	사업참여 소유요건
사후관리요건	사업유지 가업종사 지분유지 근로자수유지	사업유지 고용유지	가업종사 지분유지 거주자 사업장소	없음	사업참여 고용유지 지분유지
공제내용	70%공제 최대 300억원	5년간 급여총액 400%유지: 85%공제 7년간 700%유 지:100%공제	가족사업지분 상 속시 675,000\$ 한도 공제	사업자산공제 비상장 100% 상장 50% 공제	80%공제 과세유예
할증평가	최대 30% 할증	회사운영에 영향 미치지않는지분 10% 할인	없음	없음	30~50%할인

출처) 한국조세연구원, ‘주요국의 가업상속제도 및 정책적 시사점’ 2010년, 2013 국세청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각 나라의 상속세율



➔ 뉴질랜드, 이탈리아, 스웨덴, 포르투갈 등은 상속세 폐지

[2] 독일과 한국의 가업상속공제 비교

		한국	독일
적용 대상	기업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 중견기업(매출2000억이하) 	제한 없음
	최대주주 보유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장주식: 30%이상 · 비상장주식: 50%이상 	비상장&상장주식: 25%이상
	피상속인 사업기간	10년 이상	제한 없음
	상속인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개시 2년전 가업종사 · 신고기한 6개월내 임원 취임 ·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 상속인 1인이 가업 전부 상속 	제한 없음
공제율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간 가업유지: 85% · 7년간 가업유지: 100%
공제한도		100~300억원	한도 없음
사후 관리	기간	10년 내 요건미비시 전액추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미비시 미달한 부분만큼 안분하여 추징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업용 자산 80% 이상 유지 · 상속지분 유지 · 상속인 가업종사 · 정규직 근로자 1.2배 유지 (중소기업은 1.0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간 임금합계: 상속시점 400%이상 · 7년간 임금합계: 상속시점 700%이상

(3) 독일 가업승계제도 시사점

1. 적용대상

독일: '사업용 자산' 승계 (기업규모 제한 없음)

우리나라: 중소기업 & 매출액 2,000억 이하 중견기업

2. 상속인, 피상속인 요건

독일: '특별한 제한 없음'

우리나라: 상속인, 피상속인 요건 엄격

3. 사후관리 규정

독일: '사업의 계속성과 급여총액 유지' 요구
요건 이행성과에 따라 안분하여 추징

우리나라: 10년간 120% 고용유지, 위반 시 전액 추징

4. 할증평가

독일: 할증평가 없음

우리나라: 최대 30% 할증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기업의 계속성이 상속, 증여세에 의하여
위협을 받을 경우에는
위헌 소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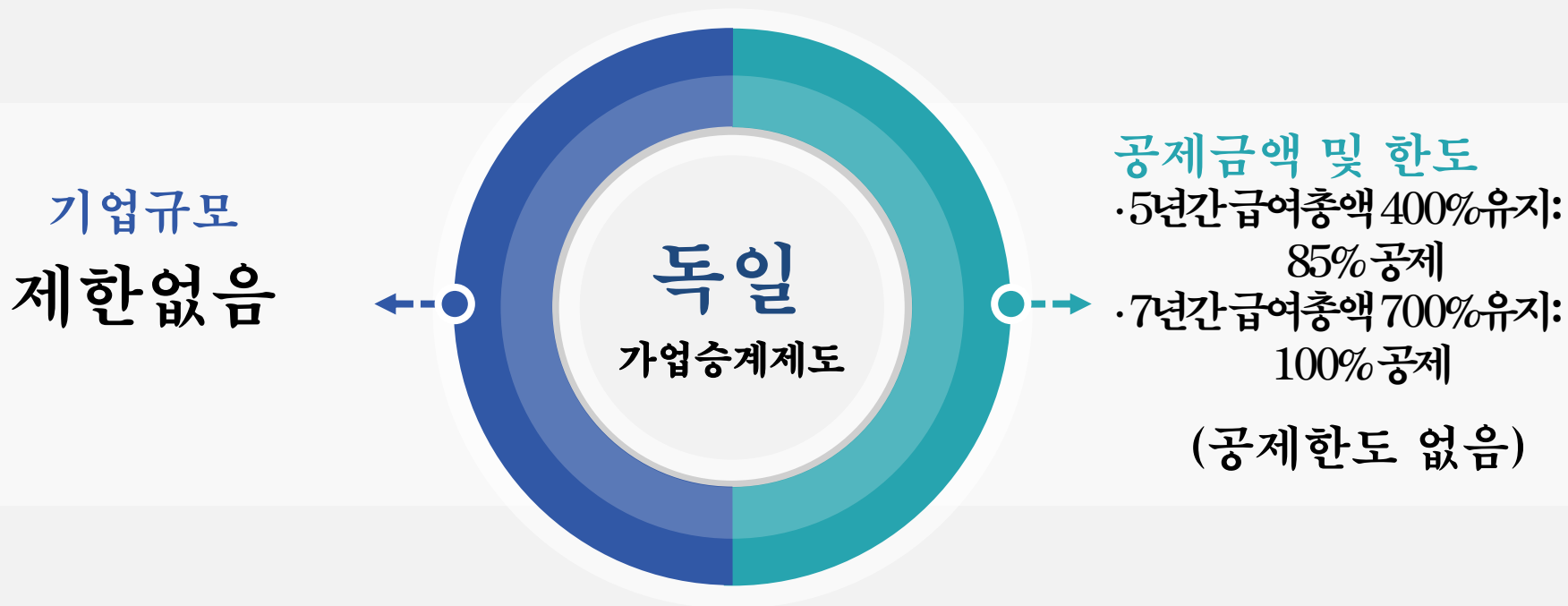
- ➡ 우리나라도 기업의 영속성 유지, 고용창출이라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실효성 있는 보완책 필요



독일식 가업승계제도 도입방안



독일식 가업승계제도로 개편



➡ 독일은 지속적인 가업승계요건 완화로
지난 5년간 10개사 중 1개사가 가업승계 완료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구분	
① 공제대상	
② 공제율	
공제한도	
③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최대주주 지분율	
④ 상속인 요건	
⑤ 사후 관리	고용유지
	추징요건
⑥ 할증평가	

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 중견기업(매출2,000억원 이하)
70%
100~300억원
10년 이상 계속 경영
상장 30% / 비상장 50%
2년전부터 가업종사
1인 상속
정규직 1.2배 유지 (중소기업 1.0배)
미이행시 전액 추징
최대 30% 할증



도입(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 중견기업 (매출 1조원 이하)
100%
한도 없음
5년 이상 경영
상장 20% /비상장 40%
가업종사기간 폐지
공동상속가능
(독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급여총액 유지: 85%공제 · 7년 급여총액 유지: 100%공제
미달한 부분만큼 안분 추징
할증평가 폐지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완화

구분	현행	도입(안)
① 공제대상	· 중소기업 · 중견기업(매출 2,000억원 이하)	· 중소기업 · 중견기업(매출 1조원 이하)
② 공제한도	30억원	대폭확대(상속공제 수준)
③ 공제금액	5억원 공제후 특례세율	증여가액의 70%
④ 시행시기	‘13년말 일몰	제도 상설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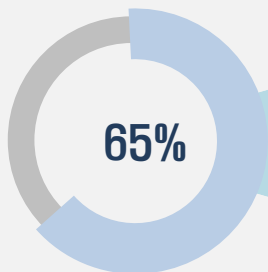
[1] 공제대상 1조원까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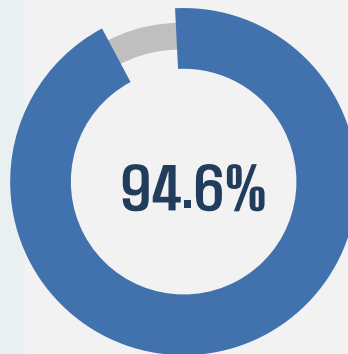
정책 대상자

중견기업 1,422 개사 중

정책 대상기업은 925개사(65%) → 1,346개사(94.6%)로 확대



2천억 이하 925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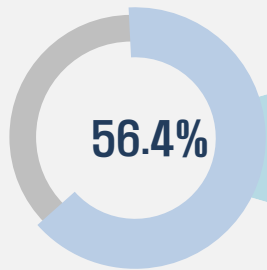
1조원 이하 1,346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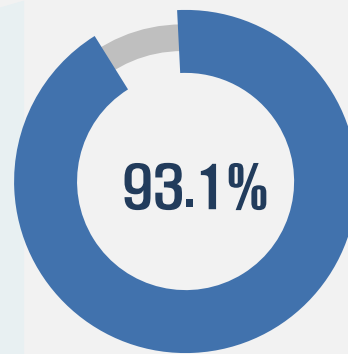
수혜자

상속인 · 피상속인 요건을 충족한 684개사 중

수혜 기업은 386개사(56.4%) → 637개사(93.1%)로 확대



2천억 이하 386개사



1조원 이하 637개사

[2]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 완화

피상속인 요건

1 10년 이상 계속 경영 → 5년 이상 경영

2 최대주주 지분율 50%(상장 30%)
→ 40%(상장 20%)

3 미국처럼 실질적으로 사업에 중대하게 참여했는지 여부를 반영 (60%이상 대표이사 재직요건 완화)

➡ 장기적으로는 피상속인이 전문성을 갖추어 운영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정요소를 도입

[2]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 완화

상속인 요건

1 2년 전부터 가업종사 → 종사기간 폐지

2 1인 상속 → 공동상속 허용

➡ 상속인 요건은 주요국과 같이 사전요건을 통해서 보다는 사후요건을 통해 규정하는 것이 필요

[3] 고용유지 기준 완화

승계후 고용유지

정규직 1.2배 유지→

5년간 급여총액 400% 유지: 85% 공제

7년간 급여총액 700% 유지: 100% 공제

추징요건

미이행시 전액 추징→

미달한 부분만큼 안분 추징

[4] 장기적 과제

“글로벌 장수기업 육성”

백년 장수기업과
일자리 창출 위한
CEO의 의지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 인식 제고

가업승계를 위한 실효성있는 보완책 마련
장기적으로는 황금주 제도, 자본이득과세로 전환



기대효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 향후 10년간 4만9천명

2011년 중견기업 수	2011년 근로자 수	10년 후 근로자 수	신규일자리 창출수 (10년후 근로자수- 2011년 근로자수)	가업승계 예상기업 신규일자리 창출수
1,422개	82.4만	103.3만	20.9만	4.9만

(자료) 2011 중견기업 통계

주) 10년 후 근로자 수는 03~11년까지 추세를 바탕으로 추정

가업승계 예상기업 신규일자리 = 신규 일자리창출 수 * 23.6% (가업승계 예상기업 비율)

10년 후 중견기업 근로자 수는 **103.3만 명** 으로
10년간 20.9만 명 신규일자리 창출 가능
이 중 가업승계 예상 기업은
“4.9만 명 신규일자리 마련”

원활한
가업승계



중장기적으로 세수 측면에서도 불리하지 않음

상속세를 전액 감면한다 하더라도, 이 경우 감소하는 조세수입은
3~4년이 경과하면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통해 상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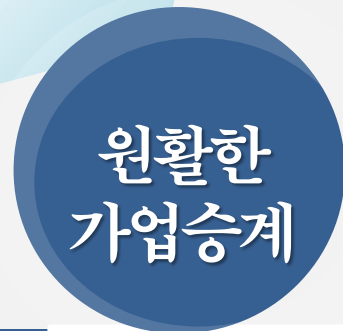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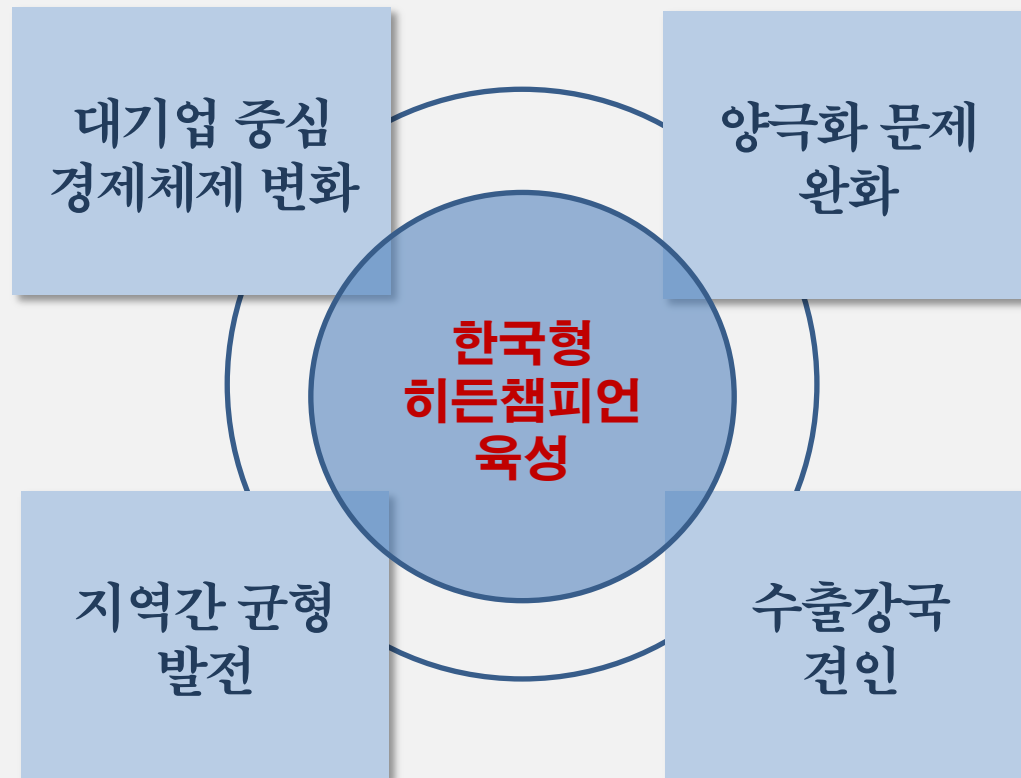
구분	현행 (공제한도 300억원, 공제율 70%)		개선안 (공제한도폐지, 공제율 100%)	
상속세 평균감면액	53.7억원		92.4억원	
제세금 납부 누적 평균예상액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28.8억원	59.4억원	91.8억원	126.2억원
등가기간(년)	1.9년		3.1년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세무학회 ‘가업승계 성과분석 및 선진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결과’, 2013

원활한
가업승계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 해소에도 기여**





Thank you



중견·중소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발표 : 주정일 전무(삼일회계법인)

2013.08

목차

I. 도입 취지와 현황

03

II. 현행 규정의 문제점

07

III. 개선방향

16

도입 취지와 현황

I

I. 도입 취지와 현황

● 도입 취지

'일감몰아주기 과세 도입취지' 신문기사

비상장법인을 통한 세금 없는 부의 상속을 막기 위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과세 방안 검토

[KTV 한국정책방송 2011.4.1]

'공정사회' 실현을 명분으로 내세운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과세** 방안 고심

[한국일보 2011.6.5]

'대기업 편법증여 과세' 대기업 일감몰아주기는 중소기업 일감을 빼앗는다는 1차적 문제점이 ...

[동아일보 2011.7.1]

● 2013. 7 첫 시행결과

신고대상자 약 1만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함

□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로 추정되는 약 1만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 수혜법인(약 6,200개)에게도 해당 지배주주 등이 증여세를 신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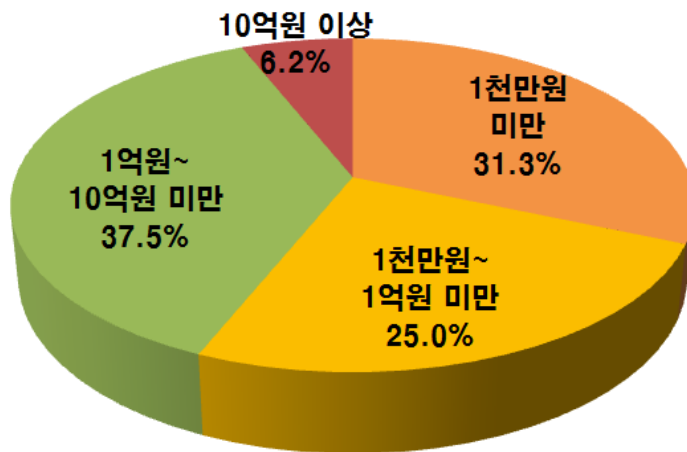
(*) 국세청 2013.7.4 보도자료

증여세 신고안내문발송대상 1만명 중
99%가 중소·중견기업
(30대 대기업 70여명)

I. 도입 취지와 현황, 계속

■ 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 실태조사(중견련, 2013.7.25, 120개사 대상)

[증여세 구간별 중견기업 분포]



[계열사간 거래가 필요한 이유]

구분	응답비중(%)
안정적 공급의 확보	45.4
기술 유출 방지	25.5
거래비용 절감	23.6
투자리스크 분산	4.2
기타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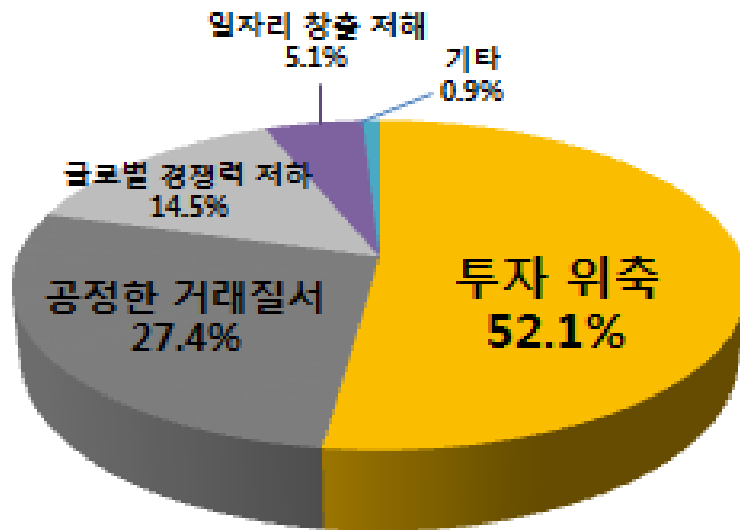
(*) 자료: 중견기업연합회

- 전체 응답기업 중 38.3%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
- 전체 응답기업 중 97.5%가 계열사간 거래가 필요하다고 응답

I . 도입 취지와 현황, 계속

▪ 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 실태조사(중견련, 2013.7.25, 120개사 대상)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영향]



[개선과제]

구분	응답비중(%)
중견·중소기업 과세대상 제외	32.8
업종별 특성 반영	25.0
정상거래 비율의 확대	22.0
수직계열화 기업 제외	12.9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	5.2
기타	2.1

(*) 자료: 중견기업연합회

정부 추정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1,000억원

V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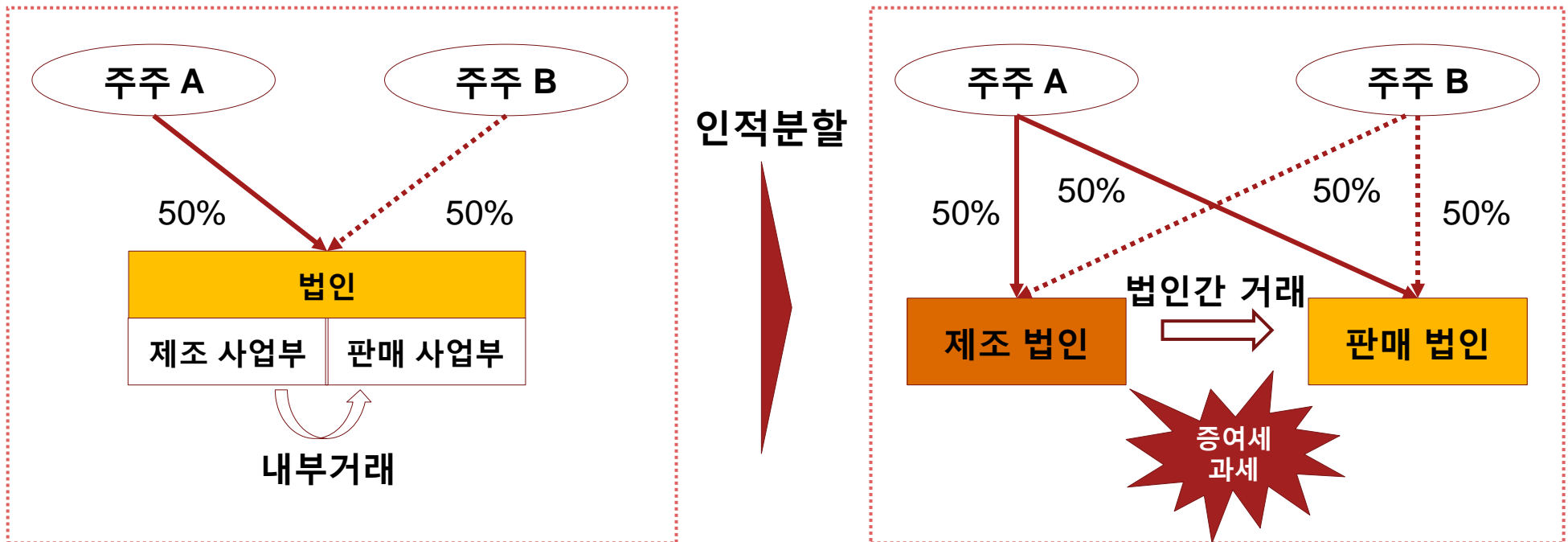
중소·중견기업 경영활동 위축
신규투자 및 고용 축소

현행 규정의 문제점(사례를 중심으로)

II

II. 현행 규정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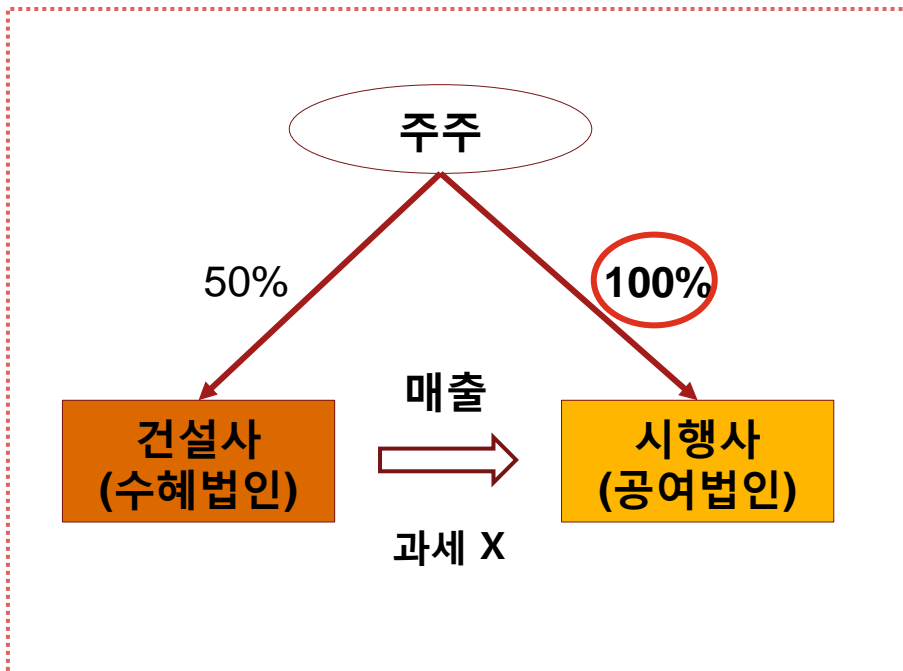
사례 1. 인적분할



✓ 기업의 경쟁력 및 경영효율성을 위한 인적분할시 증여세 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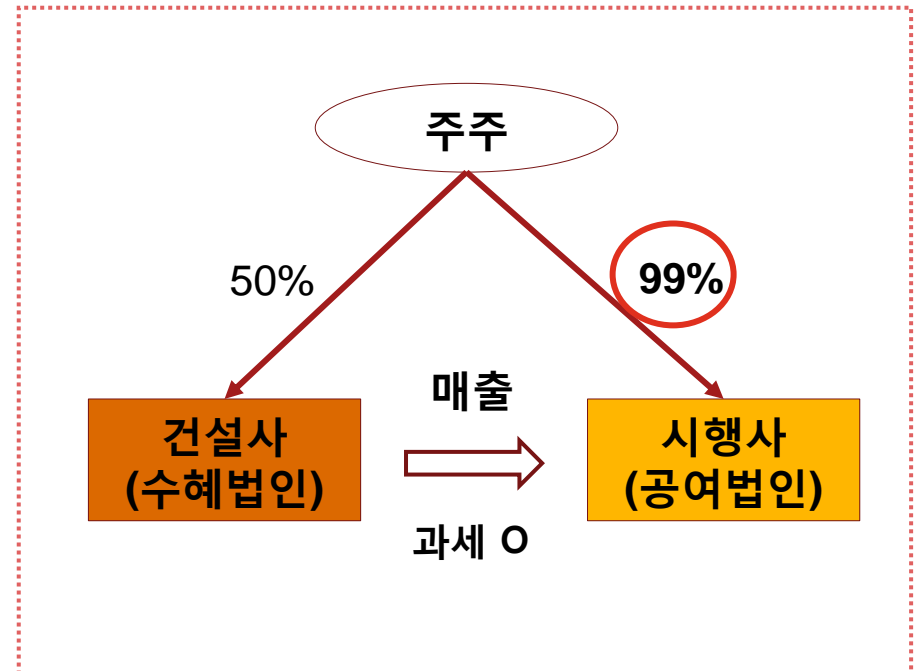
II. 현행 규정의 문제점, 계속

사례 2. 수평적 지배구조



현행 규정상,

수혜법인(건설사)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가 직접 100% 출자(완전지배법인)한 경우에 한하여 공여법인(시행사)에 대한 매출액은 자기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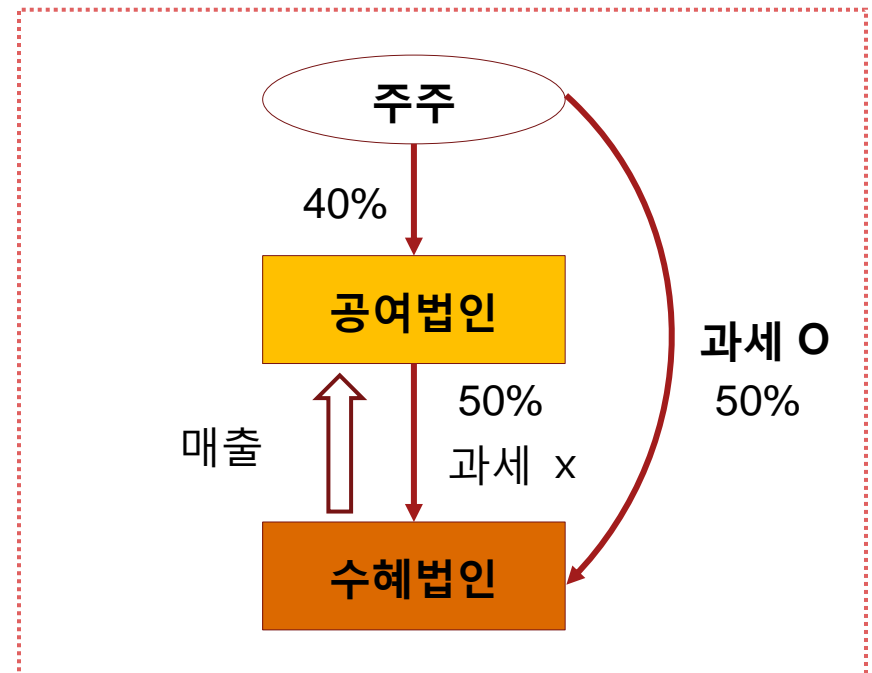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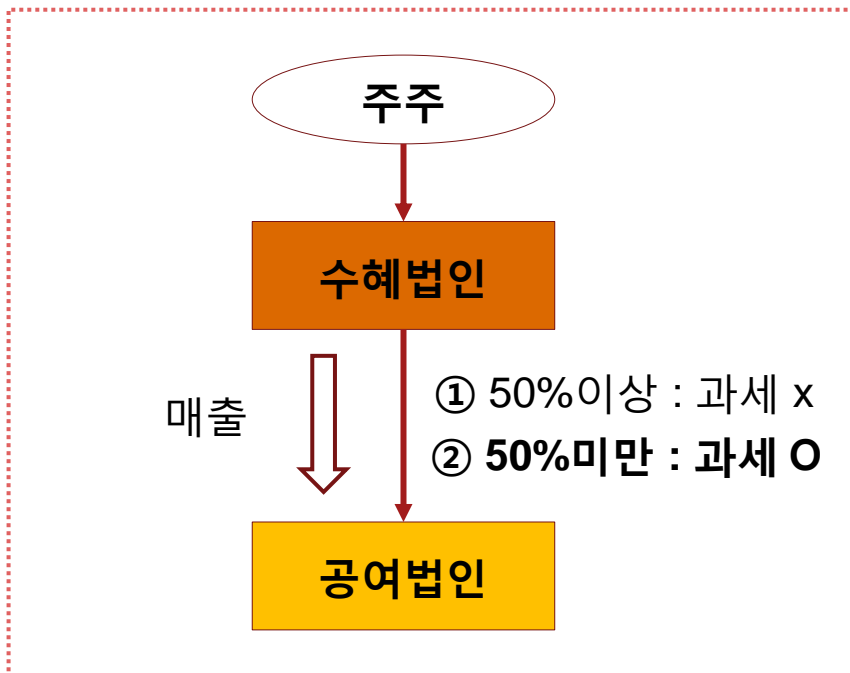


현행 규정상,

지배주주가 수혜법인(건설사)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전체(50%)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Ⅱ. 현행 규정의 문제점, 계속

사례 3. 수직적 지배구조



현행 규정에 따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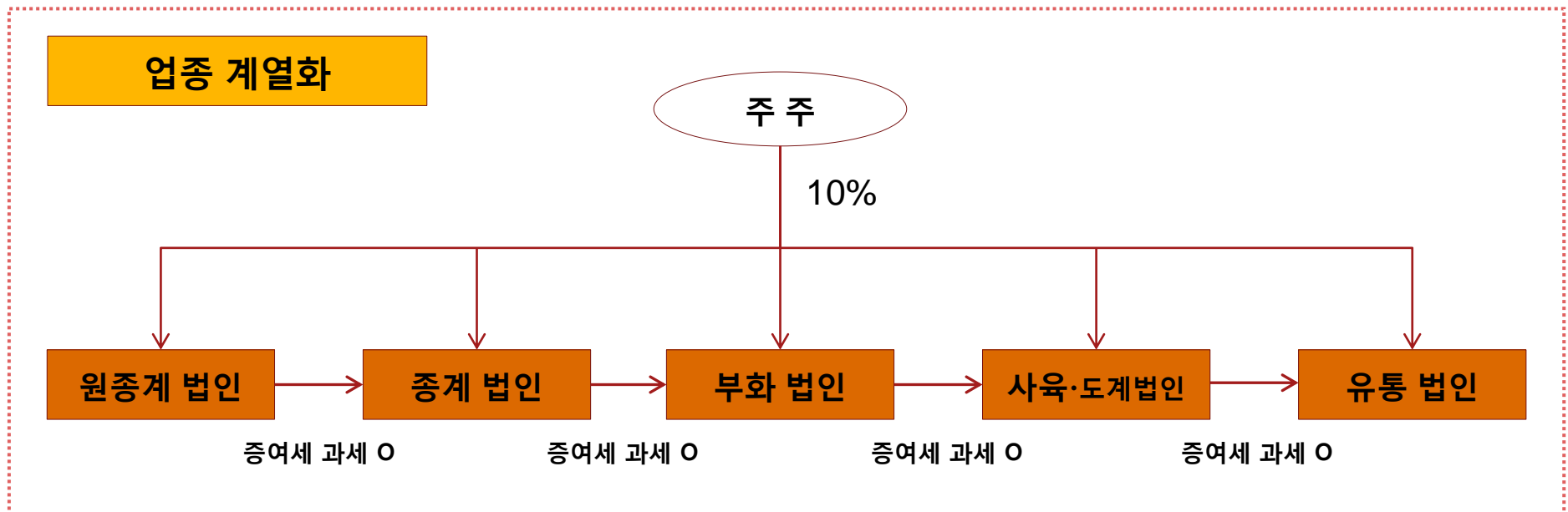
- ✓ 수혜법인이 모회사인 경우 모회사의 자회사 지분율이 50% 미만인 경우 증여세 과세
- ✓ 수혜법인이 자회사인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지분(50%)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Ⅱ. 현행 규정의 문제점, 계속

사례 4-1. 업종 계열화(예, 축산업)

‘축산계열화사업법’에 따라 축산업 계열화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은 농어민이 10%이상의 지분 보유 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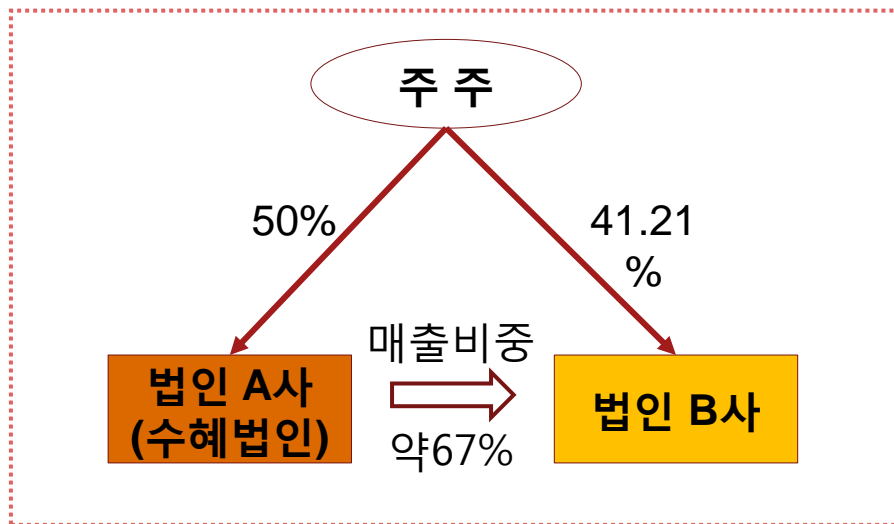


- ✓ 축산계열화는 AI와 같은 가축의 질병에 대한 **가격안정**,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축산계열화사업법’에 따라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으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발생

II. 현행 규정의 문제점, 계속

사례 4-2. 업종 계열화(예, 자동차 부품 제조업)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인 설립 후 일감 제공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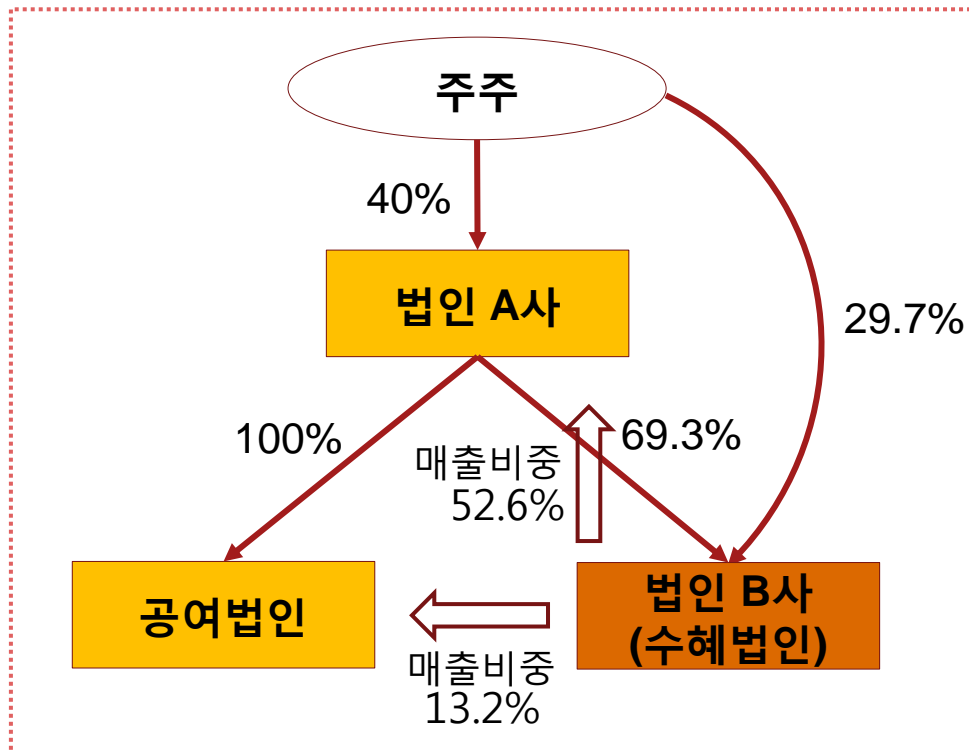
- B사는 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안정적인 부품수급이 필요한 상황임
- B사는 수입에 의존하던 자동차 부품의 국산화 및 안정적인 부품수급과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A사를 설립
- A사 매출의 약 67%가 B사와의 거래를 통해서 발생

✓ 기업의 경쟁력 및 경영효율성을 위한 법인 설립시 증여세 과세

II. 현행 규정의 문제점, 계속

사례 4-3. 업종 계열화(예, 부실기업 인수)

부실기업 인수 후 경영정상화를 위한 일감 제공



현황

- A사는 재무구조가 취약한 협력업체 B사를 인수
- 합병을 통해 B사를 인수할 계획 있었으나, 각 사의 조직문화·복리후생·급여·재무상태 등이 달라 지분취득을 통해 B사를 인수
- 재무구조가 취약한 협력업체 인수 후 경영정상화를 위한 일감 제공 시 증여세 과세

✓ 재무구조가 취약한 협력업체 인수 후 경영정상화를 위한 일감 제공시 증여세 과세

II. 현행 규정의 문제점, 계속

사례 5. 신규투자(창업, Start-up 기업에 대한 불이익)

매출 1,000억 이상의 벤처기업의 투자유치시기는 창업 5년 이내(42.1%), 창업 6~10년(30.5%) 등 창업초기에 집중

[중소기업청 2013.7.16]

스웨덴의 경험에서 볼 때 창업은 지금 같은 저성장 국면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유일한 해법

[서울신문 2013.7.18]

중견기업 초기 단계에서는 중소기업에 버금가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이데일리 2013.7.30]

법인신설을 통한 신규업종 투자



사업 초기투자로 결손발생



이월결손금과 관계없이
이익발생시점에 증여세 과세

신규 투자지원

VS

증여세 과세

Ⅱ. 현행 규정의 문제점, 계속

사례 6. 이중과세 조정의 어려움

현행 세법상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해당 지분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이중과세가 조정되나, 지배주주의 지분양도가능성이 낮으므로
현실적으로 이중과세가 조정되지 못할 가능성 높음

수혜법인의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업이익에 대하여

- ① 매 사업연도말 증여세가 발생되고,
- ② 배당을 받는 시점에도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므로 배당시 이중과세 조정이 필요함

개선방향

III

Ⅲ. 개선방향

1. 자기증여제외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의 정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②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상증세법 제45조의 3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규정은

법인의 영업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에 대한 지배주주의 수혜법인 지분율 해당분 전체를 증여 받은 이익으로 간주함.

지배주주가 수혜법인의 주주(수증자)이면서 동시에 공여법인의 주주(증여자)에 해당되는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한 **자기 증여의 모순**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의 기본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 '자기증여' 부분까지 과세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Ⅲ. 개선방향 ,계속

③ 자기증여 제외방안

지배주주의 공여법인에 대한 지분율을 차감하는 방안

① 현행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이익 공식

$$\text{증여의제이익} = \text{세후영업이익} \times (\text{특수관계거래비율} - 15\%) \times (\text{주식보유비율}^1) - 3\%$$

1) 지배주주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② 자기증여를 고려한 방안의 증여의제이익 공식(개선방안)

$$\text{증여의제이익} = \text{세후영업이익} \times (\text{특수관계거래비율} - 15\%) \times \left\{ \text{수혜법인지분율}^2) - \sum_{i=1}^n \text{공여법인 } i \text{에 대한 상대적지분율}^3) - 3\% \right\}$$

2) 지배주주의 수혜법인에 대한 직·간접 주식보유비율

3) 지배주주가 공여법인을 통해 수혜법인에 자기증여한 **상대적 주식보유비율**로 다음과 같이 산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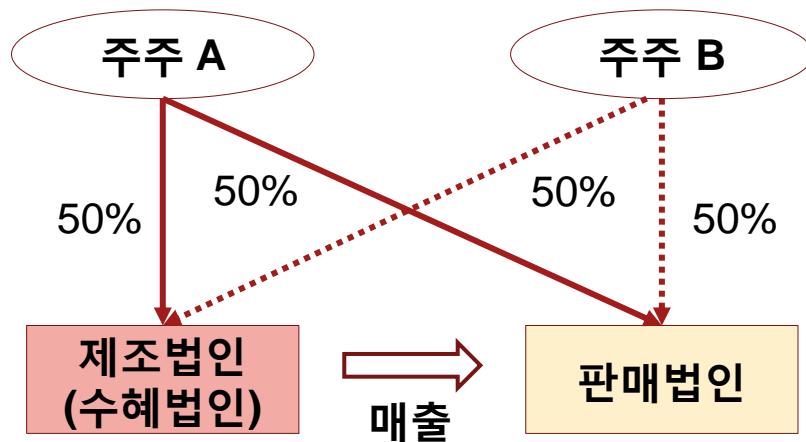
$$(*) \text{ 공여법인 } i \text{에 대한 상대적 지분율} = \sum_{i=1}^n \left(\frac{\text{공여법인 } i \text{에 대한 수혜법인 매출액}}{\text{수혜법인 총매출액}} \times \text{공여법인에 대한 지배주주 직간접지분율} \right)$$



상기 2) 지배주주의 수혜법인에 대한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을 한도로 함

Ⅲ. 개선방향 , 계속

④ 자기증여 제외로 인한 효과(인적분할)



- 수혜법인인 제조법인의 세후영업이익 100
- 수혜법인 총매출액 200 (모두 특관자 거래)
- 주주 A,B 각각 제조법인과 판매법인의 지분 50%씩 보유

1) 현행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이익(주주A : 39.95, 주주B : 39.95)

$$\text{주주A,B} = \text{세후영업이익}(100) \times \{\text{특수관계거래비율}(100\%) - 15\% \} \times \{\text{수혜법인지분율}(50\%) - 3\% \} = 3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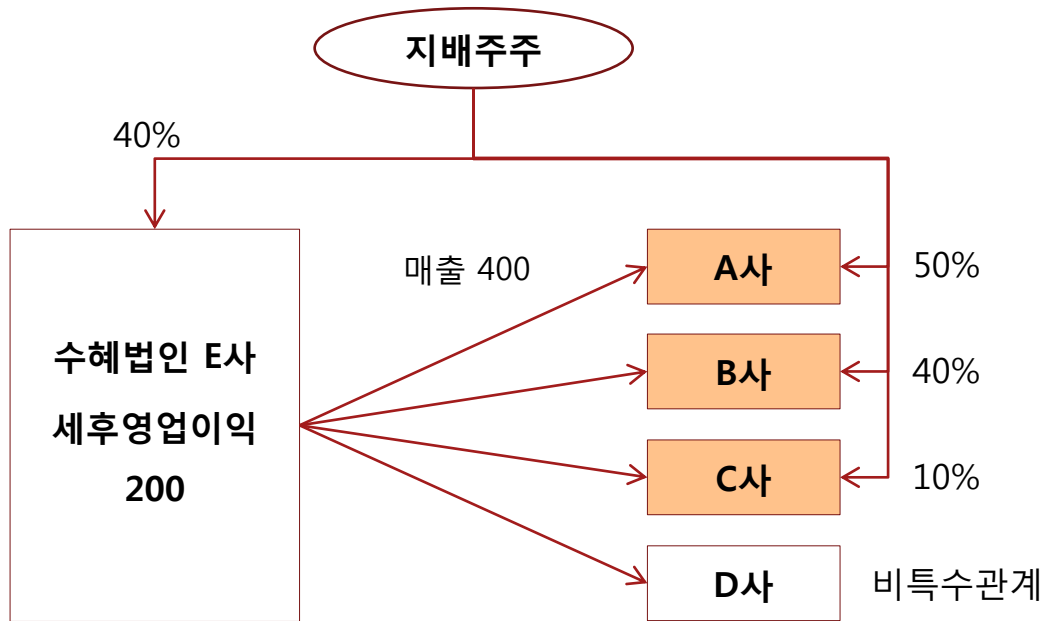
2) 개선안에 의한 증여의제이익 (주주A : 0, 주주B : 0)

$$\text{주주A,B} = \text{세후영업이익}(100) \times \{\text{특수관계거래비율}(100\%) - 15\% \} \times \{\text{수혜법인지분율}(50\%) - \sum_{i=1}^n \text{공여법인 } i \text{ 에 대한 상대적지분율}(50\% - \frac{200}{200} \times 50\% - 3\%) \} = 0$$

⇒ 자기증여분 제외를 통한 증여세 과세제외

Ⅲ. 개선방향 , 계속

④ 자기증여 제외로 인한 효과(수평적 지배구조)



- 수혜법인 총매출액 400 (A,B,C,D 각각 100씩)
- 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 200
- 지배주주는
A사 50%, B사 40%,
C사 10%, E사 40% 지분을 보유

지배주주가 내부거래를 통하여 얻은 실제 증여이익은 17.4임(현행규정에 의하면 62.9임)

증여의제이익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거래비율 - 15%) × {수혜법인지분율 - $\sum_{i=1}^n$ 공여법인 i 에 대한 상대적지분율 - 3%}

$$\begin{aligned}
 &= 200 \times \left(\frac{300}{400} - 15\% \right) \times \left\{ 40\% - \left(\frac{100}{400} \times 40\% + \frac{100}{400} \times 40\% + \frac{100}{400} \times 10\% \right) - 3\% \right\} \\
 &= 17.4
 \end{aligned}$$

Ⅲ. 개선방향 ,계속

④ 자기증여 제외로 인한 효과(수직적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따르면,

✓ 수혜법인이 모회사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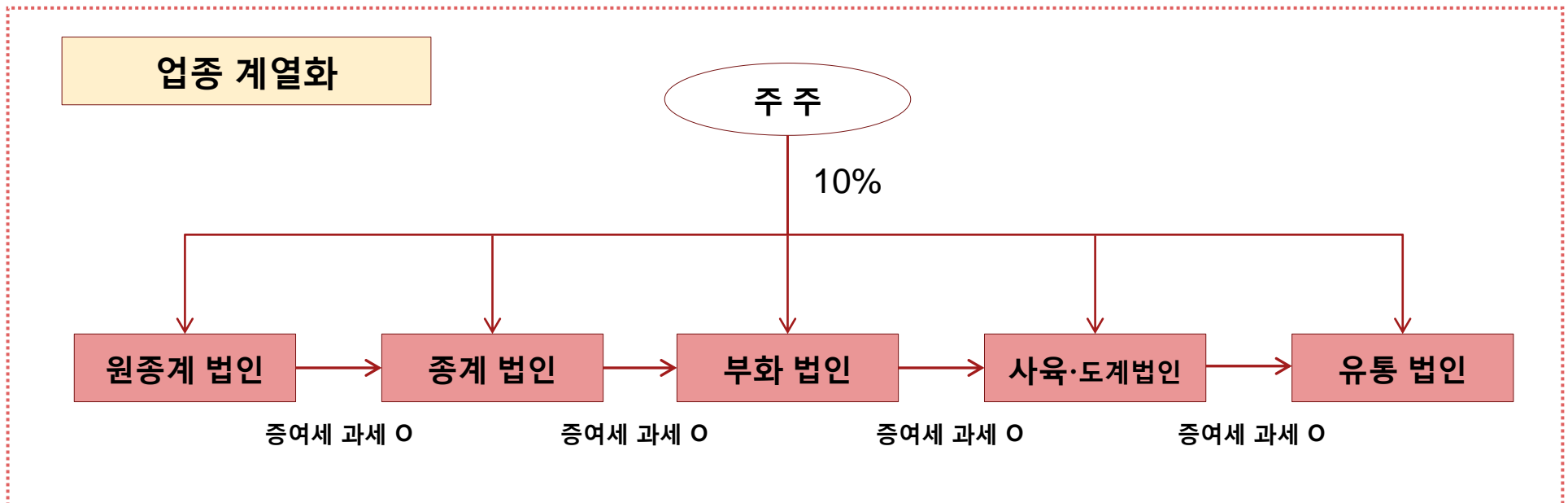
① 모회사의 자회사 지분율이 50%이상인 경우는 현행과 같이 과세 제외되고

② 모회사의 자회사 지분율이 50% 미만인 경우는 지배주주의 공여법인에 대한 직간접지분율 만큼 자기증여분이 제외됨

✓ 수혜법인이 자회사인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자기증여분 제외되어 현행보다 증여세 감소

Ⅲ. 개선방향 ,계속

④ 자기증여 제외로 인한 효과(업종계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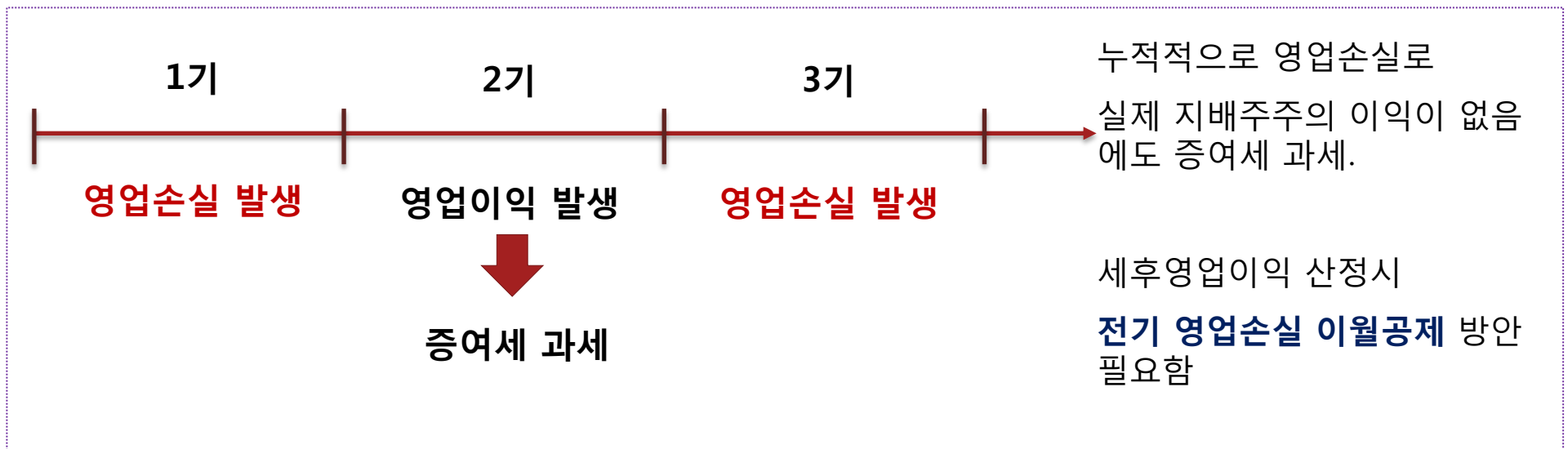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에서 서술한 자기증여 제외로 인한 효과 중 인적분할 및 수평적 지배구조에 의하면 주주가 각 법인 지분을 10%씩을 동일하게 가질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음

Ⅲ. 개선방향 ,계속

2. 세후영업손실의 공제 (창업, Start-up 기업에 대한 불이익 해소)



Ⅲ. 개선방향 ,계속

3. 이중과세의 조정 방안 (양도소득에서의 이중과세 조정 어려움 해결)

수혜법인이 배당시 이중과세조정

①안: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수혜법인의 배당확정액을 세후영업이익에서 차감하여 **증여세** 산출시 조정하는 방안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세후영업이익에서 수혜법인 배당확정액을 다음과 같이 반영함

$$= (\text{세후영업이익} - \text{배당확정액}^{1}) \times \text{세법상영업이익} / \text{각사업연도소득금액} \times (\text{특수관계거래비율} - 15\%) \times (\text{주식보유비율} - 3\%)$$

1) 배당확정액은 증여시점인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말부터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사이에 확정된 배당금액


2) 배당확정액 중 영업이익 해당부분을 상기 산식에 의하여 세후영업이익에서 공제함

②안: 지배주주의 **배당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세액에서** 이중과세 조정하는 방안

Ⅲ. 개선방향 ,계속

4. 법인세 세무조사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필요성

- 증여세 산출의 근거가 되는 **세후영업이익**은 법인세 세무조사에 의하여 변경될 가능성
- 법인세 세무조사로 인한 증여세 추가 신고·납부시 **높은 율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
 - 부정(일반)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의 40(2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세액의 0.03%×미납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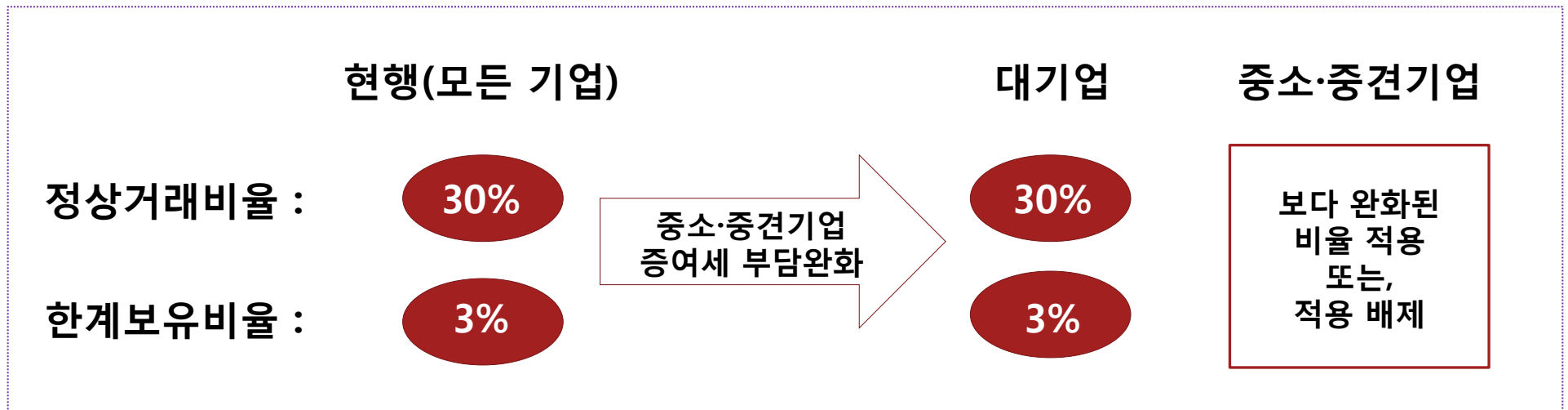


법인세 세무조사로 인한 증여세 추가 납부시 신고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면제
(단, 고의로 인한 경우 제외)

Ⅲ. 개선방향 ,계속

5.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증여세 부담 완화

-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도입취지가 대기업의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 축소임
- 그러나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의 대부분이 중소·중견기업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증여세 부담 완화 방안이 필요함



감사합니다.